

현장과 시각

경찰의 '인간 사냥'?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지난 6~7일 정치권과 네티즌 사이에서 뜬금없이 '사냥'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연행한 경찰에 대해 '불구속 2만원', '구속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불법 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총담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야당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6일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라며 "사람의 사냥꾼"은 들어봤지만 국민을 사냥한다는 경찰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명백한 '인간사냥'이라고 규정하고 '경찰은 시위대의 국민이 모두 돈으로 보일 것이며, 싸움이 검거를 위해 '노예사냥'에 사용했던 인간 포획용 그물이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촛불집회에 비판적이었던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성과급에 눈이 먼 경찰의 과잉진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면서 "경찰이 시위대를 간첩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비난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민들은 원색적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원병수'씨는 "무슨 사냥대회 하는 겁니까. 시위자를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 혹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선진국 일본에서 많은 걸 배워오신 분이 수장을 맡으셨는데"라며 검거가 신임 서울청장을 힐난했다.

'이수만'씨는 "체포수당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응원합니다. 마치 과수에 피해를 주는 금수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들과 같은 당신들의 모습을 응원합니다"라며 반어법을 써가며 경찰을 비난했다.

'윤주선'씨 역시 "인간사냥꾼? 호러물 제목이네요. 후안무치 천 인공노란 이빨 때 쓰라는 말,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질타했다.

경찰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총검'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한 과파라지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6일 현금 포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경찰은 촛불집회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위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추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사과 없으면 국회 보이콧”

민주, 장관 임명 강행·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반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KBS 정연주 사장 문제 등으로 촉발된 대역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8월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세균 대표는 7일 국회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은 여야 합의를 짓밟은 것으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이라며 “참으로 부끄럽고 격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또 “내일 열리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 될 것이고 KBS 이사회의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8월에 많은 땀을 흘려 9월 정기국회 준비를 잘해 국민의 거려온 곳도 끊어주자”고 말해 이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8월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오만과 독선을 주요 성격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모든 국면과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국 경색이 되든, 국회가 파행이 되든 내 식대로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멈출지 걱정”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지 않고 물러섰다가는 자칫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권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어떤 명분도

주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

또 당 일각에서 현재의 정국 구도가 국회 특위 활동이나 국회 내 정상적인 일 처리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구도로 판단하는 것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즉, 올 하반기의 정국을 정치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청와대를 찾아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 항의하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김영진 의원 “사할린 동포 이주·지원 제도 마련”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울) 의원이 7일 “사할린 동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와 함께 동포 이주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기독교연맹 소속 의원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1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의 이주와 지원에 관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사할린 동포 3천여 명의 희망을 꺾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국회로 돌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동포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끌어내고,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기독교연맹의 한국 측 대표 회장인 김 의원은 “고통의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사할린에서 1세 노인의 비극적 운명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의료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유권자 벌써 오바마에 피로증후군

지지를 2개월째 제자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2개월째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갈 길 바쁜 오바마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가 2주여 밖에 남아 있지 않고 11월4일 열리는 본선 역시 3개월도 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는 대선 승리를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

50%의 벽을 아직 한 차례도 넘지 못하고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지지율 경쟁에서도 내세울 만큼 의미있는 격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변화의 메시지와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신선함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오바마 피로증후군을 불러오면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 이후 10년간 美귀화 한국인

17만 4,453명

지난 1998년 이후 작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취득,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은 모두 17만4천453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발간한 '미국 귀화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인 1만7천628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66만 477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전 국적별 순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이다.

작년에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로 총 12만2천258명(18.5%)이었으며 인도(4만6천871명), 필리핀(3만8천830명), 중국(3만3천134명), 베트남(2만7천921명), 도미니카공화국(2만645명), 한국(1만7천628명)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 1998년 이후 10년간 미

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인은 모두 17만4천453명이었으며 2000년 귀화자수가 2만3천717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03년 1만5천928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998년 1만211명 ▲1999년 1만7천663명 ▲2000년 2만3천717명 ▲2001년 1만7천979명 ▲2002년 1만7천252명 ▲2003년 1만5천928명 ▲2004년 1만7천184명 ▲2005년 1만9천223명 ▲2006년 1만7천668명 ▲2007년 1만7천628명 등이었다.

이민귀화국에 따르면 지난 1940년 이후 작년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수는 모두 91만8천560명이었다. 한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1990년대에 17만9천770명으로 줄었다가 2000년 이후 작년까지 15만8천21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합뉴스

8월 17일 서울시 지방직 시험대비, 광주/전남 수험생 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방직 시험장 차량접수

한빛 공부원

선학순접수원, 왕복 2만원 (마감: 8월 15일) 상해보험가입, 시험장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시대가 바라는 능력,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한빛대학교 지역 연수생 모집

2008년 8월 7일

한빛대학교 지역 연수생 모집

2008년 8월 7일

한빛대학교 지역 연수생 모집

2008년 8월 7일